

나주 혁신도시 'IB 교육과정' 도입

〈국제 공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 참석 위원들이 19일 오후 도청 정철실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역 인재육성과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 열린 2022년 전라남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전라남도 교육행정협의회...글로벌 인재 육성 협업 강화 논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직업계고 취업지원 통합 운영 등 협력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은 19일 도청 정철실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2022년 전라남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행정협의회는 민선8기 지자체장과 민선4기 교육감이 주재한 첫 회의이다. 공동의장인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정철 전남도의원, 교육전문가 등 협의회 위원 14명이 참석해 앞으로 4년간의 상생과 동행을 다짐하고, 교육 관련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의 내용은 전남도가 제안한 ▲빛가람혁신도시 내 눈송이로 평가하는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 도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공동 추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사업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 3건과 교육청이 제안한 ▲전남도 권역별 직업계고 취업지원 통합운영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도 보조금 지원 등 2건이다. 국제 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과정은 스위스 비영리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가 주관한 국제공인교육과정으로 세계 161개국 5464개교에서 운영중이다. 두 기관은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빛가람혁신도시에 국제인증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이 도입되도록 전남도(TF)를 구성·운영하고,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양질의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 채용 설명회, 해외연수 등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발달단계에 맞는 성 인권 교육을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안심하고 양육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세계와 경쟁하는 위대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와 도교육청 간 협력이 필수"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도교육청과 함께 은 힘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도와 함께 촘촘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으로 전남형 교육자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교육행정협의회는 '전남교육'이 전남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되도록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교육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교육사업의 협치와 조정을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하기 위한 협력기구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민 목소리 더 가까이 들겠습니다”

민선 8기 시민권익위 첫 워크숍...위원 간 소통·역량 강화

2023년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 밀착형 소통 강화 채널인 '찾아가는 시민권익위'와 '광주 온(ON)'을 강화한다. 민선 8기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후 시청에서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2023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민권익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권익위 출범 이후 첫 워크숍으로, 시민권익위원 간 소통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양현 시민권익위원장, 시민권익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전원위원회 10회, 분과위원회 21회, 소위원회 3회, 현장 활동 5회 등 총 3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스콜존 주택가 주차장 문제 ▲자원봉사 인센티브 확대 등 총 18건의 시민 제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한 뒤 광주시에 정책권고 했으며,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찾아가는 시민권익위원회' 활동으로 현장소통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기다. 현장소통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현장을 찾아 시민의 고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 6월14일 남구 빛고을컨벤션홀에서 '찾아가는 시민권익위원회'를 열어 불편사항, 행정제도 개선사항 등 총 59건을 접수받아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제안 우수사례 공유와 온라인 시민광장 '광주 온(ON)'을 통해 접수된 도시철도2호선 3단계 해결 등 시민 제안 등도 논의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운영방향 목표를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기 위한 밀착형 소통 강화'로 정하고, '찾아가는 시민권익위'와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 온(ON)'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행복지역화폐 광역 플랫폼 구축'

조폐공사와 협약...상품권 이용 편의·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확대

전남도가 19일 도청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편의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남행복지역화폐 광역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남도가 한국조폐공사 지역화폐 광역 플랫폼 구축사업에 우선 시범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광역플랫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강화 ▲전남행복지역화폐 발전을 위한 공사-도-시·군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전남행복지역화폐와 연계한 전남도 관광 등 부가서비스 연계 및 정책수당 고도화를 통한 도민과 관광

객 편의성 극대화 등에 협력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2023년 상반기 중 전남행복지역화폐 전용 앱을 개발하면 전남 22개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나의 앱에서 구매하게 된다. 전남도는 '전남행복지역화폐 광역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화폐의 발행과 부징용의 심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체 생산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배달·쇼핑·정책수당 지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는 손쉽게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의대 유치 추진전략 토론회

내년 활동 계획·다음달 국회 토론회 봄 조성 방안 등 논의

전남도는 19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의대 설립 관련 정부 동향과 2023년 의대 유치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전남 도내 의과대학 유치 TF' 2차 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전남연구원과 지자체 등 '전남 도내 의과대학 유치 TF' 내 2개 분과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1부 TF 회의에선 국립 의과대학 설립 관련 주요 동향과 TF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2023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예정된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기관별 협력 사항과 설 명절 귀성객과 도민 대상 의대 유치 홍보 및 봄 조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2부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는 의과대학 관련 법안, 의료 현실과 대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황성용 광주전남연구원 위원은 의대와 관련해 법안 발의된 11건의 법안 주요 내용을 분석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전남 등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을 강조했다. 이정미 전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전남의 공공의료 현실과 대안을 발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폐기물 불법투기 끝까지 추적

신안군, 북부·중부권 특별 관리

신안군이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범죄 조직이 육지와의 연絡으로 접근성이 용이해 쓰레기 투기꾼들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북부권과 중부권을 우려 지역으로 선정,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폐기물은 불법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전 군민 홍보를 통해 임대료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비 570억 지원

전남도, 12만6000여명에 ha당 평균 66만원

전남도가 2022년 1월 1일부터 전남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전남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원을 지급한다. 농가별 2ha 한도로 직불금 형태로 지급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가 가입 농지는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다만 농업 외 중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이거나, 0.1ha 미만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전남지역 12만6000여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며, 평균 지급 단가는 ha당 66만원이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남도가 쌀 시장개방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 유지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지속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직불금과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자금이다. 2001년 18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투입한 총사업비는 9690억원에 달한다. 이는 벼 재배 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는 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농자재·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